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THE WEALTH GUIDE

2025 Vol.5



Part.1 노후

연금제도 개혁 동향과 향후 과제는?



연금제도 개혁 동향과 향후 과제는?

한화생명 김치완 노후설계 전문가

chiwan.kim@hanwha.com

(작성일 : 2025.4.30)

Summary

- 인구 고령화는 세계 공통적 현상으로 OECD 회원국들은 연금재정 안정화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제도개혁 진행 중
-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고갈시점 최대 15년 연장 예정. 다만,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
-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은 개인연금에 대한 자발적 가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세계 각국은 연금개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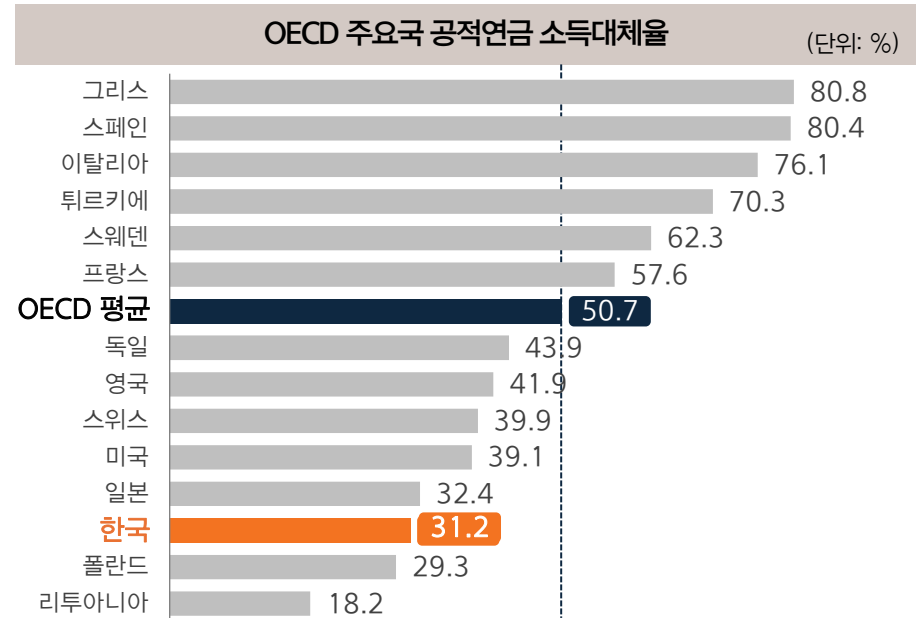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 추세로,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과거 30년(1990~2020년) 평균 17%에서 향후 30년(2020~2050년) 평균 27%로 약 10%p 증가할 전망
- 고령인구의 증가가 연금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OECD 회원국 최근 연금제도 동향의 핵심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임. 특히, 개시연령을 기대수명과 자동연계(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한 나라들 중심으로 개시연령이 계속 늘어나 **덴마크 74세, 이탈리아 71세, 네덜란드의 경우 70세부터 연금 지급**. 한편, 이스라엘 등 몇몇 나라는 여성가입자 개시연령이 2~5년 빠른 것으로 조사

OECD 주요국 공적연금 개시연령 (단위: 연령)	
70세 이상	덴마크(74), 에스토니아(71), 이탈리아(71), 스웨덴(70), 네덜란드(70)
65세 이상	핀란드(69), 슬로바키아(69), 포르투갈(68), 호주(67), 벨기에(67), 독일(67), 아이슬란드(67), 이스라엘(67), 노르웨이(67), 영국(67), 미국(67), 그리스(66), 아일랜드(66), 오스트리아(65), 캐나다(65), 칠레(65), 코스타리카(65), 체코(65), 프랑스 외 11개국
60세 이상	콜롬비아(62), 룩셈부르크(62), 슬로베니아(62), 한국 (65세로 단계적 상향 진행中)
성별 차등 (남성/여성)	이스라엘(67/65), 코스타리카(65/63), 헝가리(65/62), 폴란드(65/60), 튀르키예(65/63), 콜롬비아(62/57)

* 자료 : Pension at a Glance 2023, OECD. OECD 평균 개시연령 64.4세('22년 은퇴자 기준)

한국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모델

-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요율(9.0%)은 OECD 회원국 평균(18.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이탈리아 33.0%, 프랑스가 27.8%이며, 지난 '04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일본 또한 18.3%에 달함.
- OECD 회원국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50.7%) 또한 우리나라(31.2%)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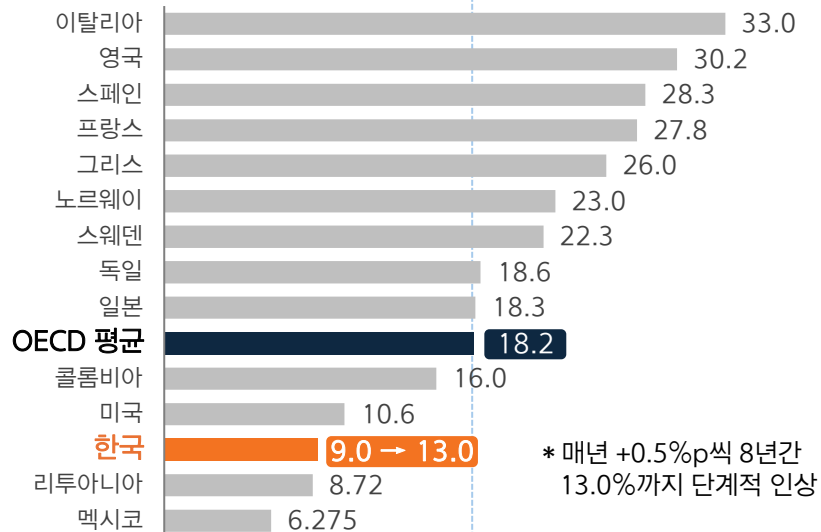


* 자료: OECD Pension models
주) 중위소득(M=1) 남성 근로자 총 소득대체율(GRR) 기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개혁 반복 불가피

- 국민연금제도 도입은 '88년으로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도입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래 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로 **제도가 제대로 성숙되기도 전에 불가피한 연금개혁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음.**
- 세 차례에 걸친 단계적 소득대체율 인하와 더불어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65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연금개혁안에서는 '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요율 인상도 포함돼 이제 '자동 조정장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금개혁 방식이 동원된 상황

OECD 주요국 공적연금 보험요율 (단위: %)



* 자료: Pension at a Glance2023, OECD, 국민연금공단
주) 국민연금 보험요율 변화 : '88(3.0%)→'93(6.0%)→'98년(9.0%)→'25~'33년(~13.0%)

연금개혁,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더 받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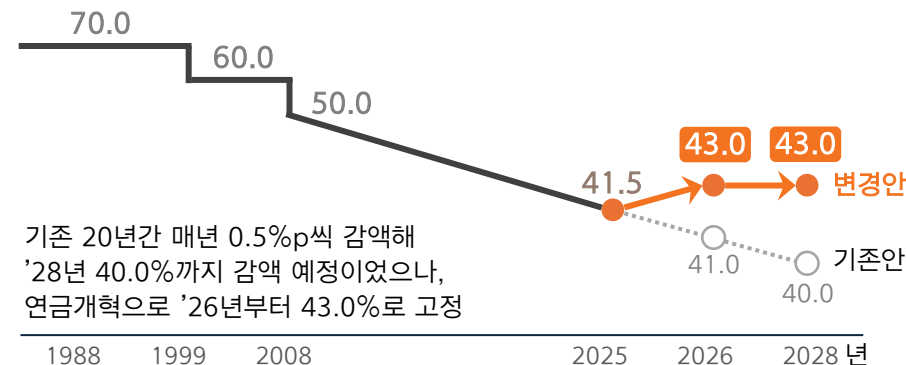
- 연금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9.0%)은 '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8년 뒤 '33년 13.0%가 될 예정.** 한편, 올해 41.5%에서 '28년 40.0%로 축소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0%로 상향 조정
- 월급여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309만원)인 A씨가 국민연금에 40년간 납입할 경우, 현행과 개편안의 총 납입보험료와 총 예상수령액(25년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제도 개혁으로 **A씨는 기존 대비 총 5,413만원을 더 납입하고 총 2,17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

(단위: 원)

A씨 사례	현행	개편안	증감
총 납입보험료	1억 3,349만	1억 8,762만	+5,413만
총 예상수령액	2억 9,319만	3억 1,489만	+2,170만

주) 현행: 보험요율 9%, 소득대체율 40%/ 개편안: 보험요율 13.0%, 소득대체율 43%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국민연금공단
주) 소득대체율: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40년 납입 가정)

크레딧 제도 개선 및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예정

- 연금개혁으로 출산크레딧은 이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적용되며, 50개월 상한은 폐지 예정. 군복무크레딧 또한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돼 **다자녀 가입자 및 군복무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편		
구분	현행	개정안
출산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최대 50개월)	첫째부터 12개월 (50개월 상한 폐지)
군복무	최대 6개월	최대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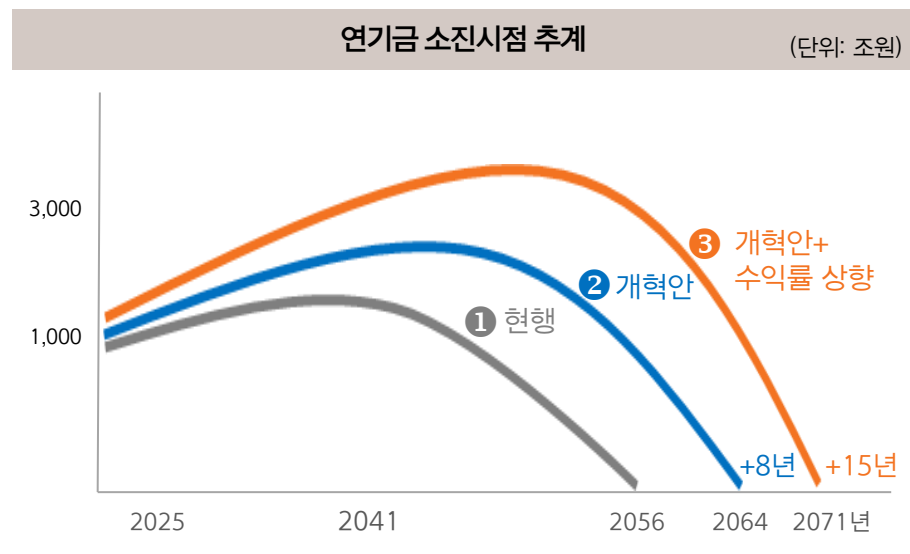
주) 출산크레딧은 2008.1.1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부부간 합의로 한 명에게 혜택을 몰아주거나 안분 선택도 가능

- 또한 기금소진으로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연금지급 보장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기로 함. 이에 따라 국민연금 또한 국가지급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강화**돼 명시될 예정

[참고] 현행 연금지급보장 관련 조문	
국민연금법 제3조의 2 (소극적 보장)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 (적극적 보장)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총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보전금)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연금개혁에 따라 기금소진 시점 최대 15년 연장 전망

- 지난 '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보험요율 9.0%, 소득대체율 40.0%, 기금수익률 4.5%)**할 경우, 국민 연금은 '41년 적자 전환, '56년이면 완전 소진 예측
- 이번 연금개혁(보험요율 13.0% 소득대체율 43.0%, 기금수익률 4.5%)이 반영되면 기금소진 시점은 '64년으로, 8년 연장될 전망이며, 예상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5.5%로 +1.0%p 상향조정할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71년으로 현행 대비 최대 15년 연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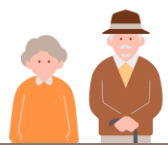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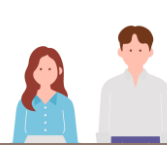


* 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이후 과제

- 일각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중 어느 하나 만족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음. 특히, **논의 과정에서 미래 청년세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월 309만원 소득자, 보험료 40년간 납입 및 연금수령 25년을 가정한 경우, 내년 20세가 되는 '06년생은 50세가 되는 '76년생 대비 보험료로 약 6,300만원을 더 내게 되는 반면, 연금 수령액은 약 5,200만원 더 적은 것으로 조사

연금개혁에 따른 세대별 연금 납입·수령액 비교 (단위: 원)

※2026년 나이 기준		
50세 (1976년생)	20세 (2006년생)	
		20세는 >>
총 납입보험료	1억 4,090만	2억 353만 + 6,263만 더 내고
총 연금수령액	3억 6,679만	3억 1,489만 - 5,190만 덜 받고

* 자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보건복지부
 주) 월 309만원 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간 수령 가정

- 한편, 당초 함께 논의됐던 ‘자동조정 장치’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출산율, 평균수명,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연금개시시점, 연금액 등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로 이미 24개 OECD 회원국이 도입해 운영 중. 다만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 출산율 회복으로 일정 수지균형을 달성한 뒤 적용돼 연금에 미치는 변화폭이 적었으나, 우리나라의 자동조정 장치 도입은 곧 연금삭감을 의미한다는 우려로 이번 개혁안에는 반영되지 못함.
- 현재와 같은 인구 고령화 추이를 감안하면 가입자 보험료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져 결국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국고 투입은 불가피할 전망. 또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그간 투자해 왔던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지분 매각으로 이어져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쳐 ‘개인연금에 대한 자발적 가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음.
- 미래 세대가 겪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노동 개혁과 더불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 출산율 제고 등 국민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 종합적 플랜이 필요
- 우선적으로 이번 연금개혁 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비롯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연계한 종합적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임.



필수안내사항

-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한화생명보험(주)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주)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주)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